



■ 2015년 국내트렌드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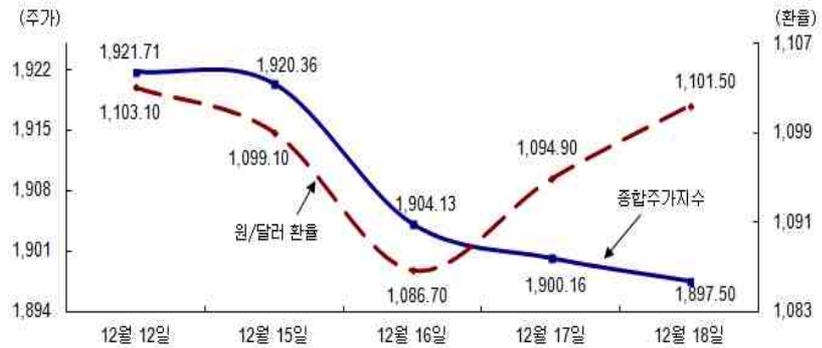
- |                   |                   |
|-------------------|-------------------|
| ① 1인당 GDP 일본 추격   | ⑥ 고용 패러다임 전환      |
| ② 차이코리아 2.0 시대 도래 | ⑦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
| ③ 각광받는 소득 주도 경제순환 | ⑧ 매뉴팩처링 리셋        |
| ④ 수출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 ⑨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호기   |
| ⑤ 해외직구와 소비자유통 혁명  | ⑩ 인구위험의 현재화       |

+

- |                           |
|---------------------------|
| ① 분단 70년, 평화통일 기반조성 본격 가동 |
|---------------------------|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12~12.18)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5년 국내트렌드 10+1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3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작 성 : 이 준 협 경제동향분석실장 외(2072-6219, sododuk1@hri.co.kr)

□ 2015년 국내 트렌드 10+1

① **1인당 GDP 일본 추격** : 2015년에 한국의 1인당 GDP(구매력기준)가 일본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2016년에는 추월할 전망이다. 일제 치하에서 광복한 지 70년만의 쾌거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0%대인 반면 한국은 3%대를 유지하고 있어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나서야 한다.

② **차이코리아 2.0 시대 도래** : 한중 FTA가 발효될 2015년에는 한중 경제관계가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문화 등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차이코리아 2.0시대가 열릴 것이다. 동북아 역내의 北비핵화, 일본 우경화 등에 대한 공동대처뿐만 아니라, 상호 이득이 되는 한중 FTA 활용, 인적·문화교류 확대 등의 시대적 과제가 놓여있다.

③ **각광받는 소득 주도 경제선순환** : 세계경제의 저성장 지속으로 수출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의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가계소득 확대가 소비·생산·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내·외수 동반 성장을 꾀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소득 주도 경제선순환 구조 형성의 걸림돌인 가계소득 부진을 해소하고 소득 분배구조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④ **수출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 2015년에 세계 수출시장 및 분업구조 재편, FTA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포트폴리오 역시 큰 변화에 직면할 전망이다. 대미, 대ASEAN 수출비중이 커지는 반면 대일, 대EU 수출비중은 감소하고, IT, 자동차 수출비중은 유지되는 반면 석유제품, 조선, 철강은 감소할 것이다. ASEAN이 글로벌 생산기지로 각광받으면서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⑤ **해외직구와 소비자·유통 혁명** : 온라인 쇼핑을 통한 구매 방식과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유통 방식이 결합하면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로부터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 형태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 해외 직접구매 시장 확대에 의해 국내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하는 반면 국내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⑥ **고용 패러다임 전환** : '고용 없는 성장'에서 '성장 없는 고용'으로, 일자리 부족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고용 패러다임 전환이

2015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용정책들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⑦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 2015년에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중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매매수요를 자극하는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전망이다. 다양한 정부정책이 시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개선되고, 특히 중소형 주택에 대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상승 반전 가능성이 큰 만큼 전세에서 '내 집 마련' 선호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⑧ **매뉴팩처링 리셋** : 선진국의 제조업 부활, 중국의 추격 등으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국내 제조업을 원점에서 再고안하는 리셋(reset) 전략이 시급하다.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제품기술 및 공정기술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한 '솔루션 산업 정책'이 시급하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산업발전정책 수립을 목표로 기존 산업별 점검과 리셋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이의 실행을 지원할 종합적인 제조업 혁신정책 마련이 요청된다.

⑨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호기** : 2015년은 오랜만에 찾아오는 '선거 없는 해'로서 경제 구조개혁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위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업의 국내투자(U턴)는 물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K턴)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모험자본 육성이 시급하며, 또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소통 강화를 통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⑩ **인구위험의 현재화** :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현재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경제성장률 잠식, 세대 간 일자리 경쟁 심화, 정부의 재정 부담 급증, 주택수요 위축 및 주택규모 변화 등이 예상된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여성층의 노동참가 촉진과 출산율을 제고하고 인적자본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⑪ **분단 70년, 평화통일 기반조성 본격 가동** : 2015년은 남북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남북간 신뢰 재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경협 추진 기반 조성, 체계적인 인도 지원 여건 마련이 요구된다.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기회라는 인식 하에 지금부터 남북경협 강화를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2015년 국내 트렌드 10+1 선정

- 2015년도에 예상되는 국내 트렌드를 경제·산업 분야 10개와 통일경제 분야 1개로 선정 및 정리
- 경제·산업 분야 : 2015년 예상되는 트렌드로 1인당 GDP 일본 추격, 차이코리아 2.0 시대 도래, 각광받는 소득 주도 경제선순환, 수출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해외직구와 소비자·유통 혁명, 고용 패러다임 전환,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매뉴팩처링 리셋,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호기, 인구위험의 현재화 등 10가지를 선정
- 남북 분야 : 분단 70년, 평화통일 기반조성 본격 가동을 2015년 통일경제 분야 트렌드로 선정

< 2015년 국내 트렌드 1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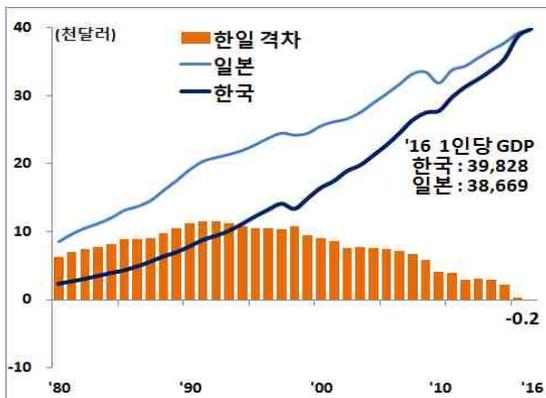
분야	트렌드 제목	선정 배경
경제산업 분야 (10개)	① 1인당 GDP 일본 추격	광복 70년 만에 일본경제 바짝 추격
	② 차이코리아 2.0 시대 도래	한중FTA와 한중관계 심화
	③ 각광받는 소득 주도 경제선순환	가계소득 증대로 내·외수 동반성장
	④ 수출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세계 수출시장 재편과 한국수출의 변신
	⑤ 해외직구와 소비자·유통 혁명	해외직구 확산의 경제사회 파급영향
	⑥ 고용 패러다임 전환	'고용 없는 성장'에서 '성장 없는 고용'으로
	⑦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전세가격 상승과 주택매매시장 활성화
	⑧ 매뉴팩처링 리셋	선진국의 제조업 부활과 우리의 대응
	⑨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호기	'선거 없는 해'로 경제체질 개선에 매진
	⑩ 인구위험의 현재화	준비부족 저출산·고령화와 경제부담
남북분야 (1개)	⑪ 분단 70년, 평화통일 기반조성 본격 가동	분단 70년과 남북 신뢰 재구축

## 2. 2015년 국내 트렌드 10+1

### ① 1인당 GDP 일본 추격

- (의미) 해방 70주년을 맞아 한국의 1인당 GDP(구매력기준)가 일본과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하여 명실상부한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임
  - 2015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에 근접하고, 2016년에는 추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한층 격상될 것으로 기대
- (내용) 2015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경제성장률 호조 등으로 일본에 근접하고, 2016년에는 추월할 전망
  - 1인당 GDP 추격 : 201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1인당 GDP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
    - 2015년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는 각각 38,760달러, 39,108달러로 격차가 크게 축소되고, 2016년에는 한국이 39,828달러로 일본 39,669달러를 역전1)
  - 경제성장률 호조 : 일본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양국간 경제성장률 격차가 확대
    - 최근 일본은 2010~2013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0% 수준이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3%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IMF와 OECD 등 기관에 따르면 2015년에도 일본은 0.8%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한국은 3.6% 성장할 전망(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 한일 PPP기준 1인당GDP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IMF  
 주 : 양국의 성장률 전망치와 IMF의 PPP rate 전망치를 토대로 자체 추정.

< 한일 경제성장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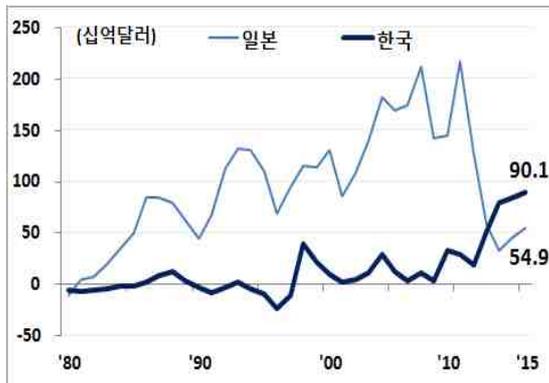


자료 : IMF,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5년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1)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15년과 2016년 한국 성장률 3.6%, 3.8%, 일본은 0.8%, 1.0%를 적용하였으며, IMF PPP rate 전망치를 토대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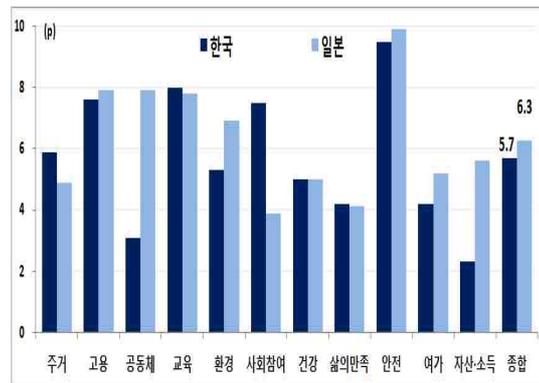
- 경상수지 역전 :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최근 일본을 추월하였으며, 이는 국민소득 확대 및 수출을 통해 국내경제 성장에 기여
  - 수출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면 국민소득과 고용의 확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및 국내경제 성장에 기여
  - 본래 일본은 한국보다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훨씬 컸지만, 2013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799억 달러로, 일본의 336억 달러를 크게 역전
  - IMF의 전망에 따르면 2015년에도 한국은 약 900억 달러, 일본은 549억 달러로 한일간 경상수지 역전 상태는 지속될 전망
- 삶의 질 개선 부족 :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는 일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항목 중에서 고용과 공동체, 환경, 안전, 여가, 소득(자산과 가처분소득 고려한 복합지수) 측면에서 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

< 한일 경상수지 추이 >



자료 : IMF.

< 한일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 비교 >



자료 : OECD.

- (시사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국내경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소득수준에 걸맞는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 경제구조 개혁과 함께 투자 확대, 창조경제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통해 3%대로 하락한 국내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
  - 국민들이 소득 수준에 걸맞는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 안전 등의 사회적 여건 개선과 공동체 의식 등 사회적 자본을 육성해야 함

최성근 선임연구원 (02-2072-6223)

② 차이코리아 2.0 시대 도래

○ (의미) 최근 한·중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더불어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협력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차이코리아(CHINA+KOREA) 2.0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

- 차이코리아 2.0시대에서 한·중 양국 관계는 과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여 질적인 발전을 추구

· 차이코리아 1.0시대 :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로서의 정치·외교적 교류의 기초 단계

· 차이코리아 2.0시대 : 정치·외교 분야에서 지역정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제·통상 분야에서 양적·질적 발전을 도모함과 더불어 양국 국민 간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양국관계를 긴밀하게 발전시키는 단계

○ (내용) 차이코리아 2.0시대에서는 한·중 양국이 정치·외교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화와 폭넓은 경제·문화 교류를 통해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시대적 과제가 대두

- 정치·외교 : 北비핵화를 위한 다자간 대화 재개 노력뿐 아니라,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한 한·중 공동대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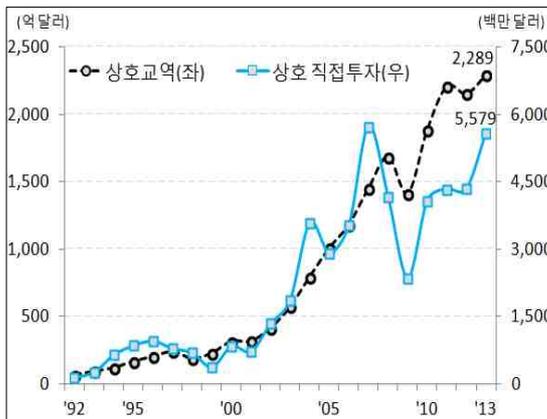
< 한중 관계 변화 >

구 분		양국 관계	의 미
차이코리아 1.0시대	수교초기 (1992~1997)	상호보완적 관계 및 선린우호 관계	- 신뢰, 평등, 호혜의 외교관계 수립 - 경제통상, 문화교류 시작
	발전단계 (1998~2007)	협력적 동반자 관계 및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관계	- 지속가능한 공동운명체 건설 - 경제협력 강화
	견고화단계 (2008~2012)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 경제협력뿐 아니라 정치, 문화 등 방 면에서 협력파트너십 구축
차이코리아 2.0시대	도약단계 (2013~현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강화	- 정치, 군사, 안보, 외교적 소통 강화 - 경제협력의 질적 발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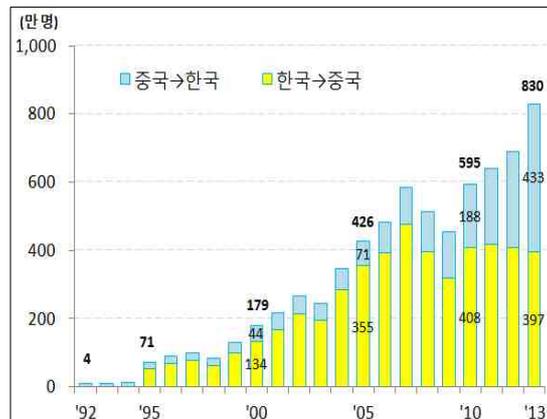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교역·투자** : 한·중 FTA 등을 통해 교역규모 5,000억 달러, 상호투자총액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질 예정
  - 한·중 양국은 2013년 기준으로 교역규모 2,289억 달러, 상호 직접투자액 55.79억 달러를 기록
  - 특히, 한·중 FTA 등을 통해 기존의 중간재 중심의 교역에서 최종재 교역으로, 제조업 중심 투자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서비스업 투자로 빠르게 전환
- **인적·문화교류** : 양국 간 인적교류 규모가 확대되고 문화교류 트렌드가 질적으로 향상될 전망
  - 한류 열풍으로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급증하면서 2013년 기준 한중 양국의 입국자는 총 830만 명을 기록
  - 상호 문화교류의 확대와 교류 콘텐츠의 다양화 및 고급화에 따라 향후 양국 교류의 규모와 질이 지속 향상될 전망

< 한·중 교역 및 직접투자 추이 >



< 한·중 입국자 총규모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자 : 한국관광공사, 中國國家旅游局, 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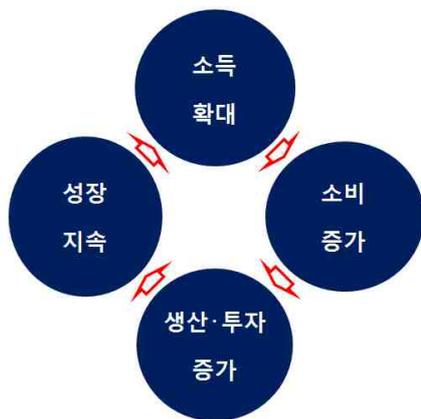
- (시사점) 차이코리아 2.0시대에서 한·중 양국은 동북아 외교 공조 강화,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
  - 양국의 긴밀한 협력공조를 통해 동북아 정세 안정에 공동으로 대처
  - 또한 한·중 FTA 등을 통해 상호 투자환경 개선과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

천용찬 연구원 (031-288-7963)

### ③ 각광받는 소득 주도 경제선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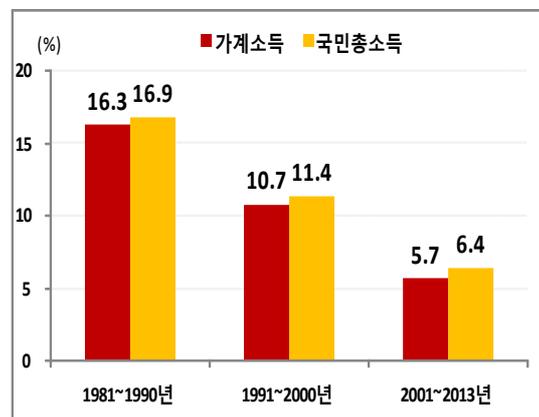
- (의미) 현재의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가계소득 확대가 소비·생산·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가 결합될 필요 점중
  - 세계경제의 저성장 지속으로 수출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소득 주도 경제선순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내·외수 경제가 동반 성장해야 할 필요
  -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경기침체 주원인인 총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성장률 제고 기대
- (내용) 소득 주도 경제선순환 구조 형성의 걸림돌인 가계 소득 증가의 부진 해소와 소득 분배 구조의 불균형 완화가 관건
  - 국민소득이 증가해도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민간소비가 부진하고 민간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하락하는 상황 해소
  - 1980년대보다 1990년대 이후 가계소득 증가 속도가 국민소득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
  - 국민총소득 증가율보다 가계 소득 증가율이 낮아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72.1%에서 2013년 61.2%로 감소
  - 민간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연평균 기여도는 1981~1990년 4.6%p, 1991~2000년 3.1%p, 2001~2013년 1.9%p로 하락

< 소득 주도 경제선순환 흐름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가계소득 및 국민총소득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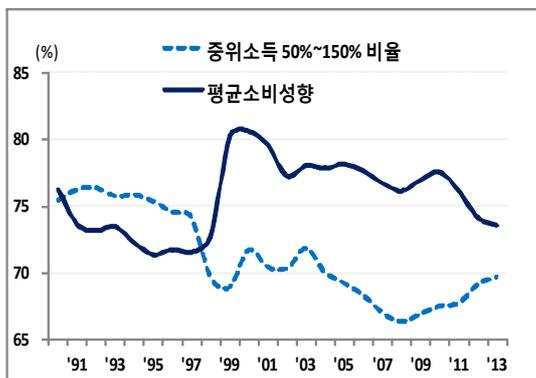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주 : 명목기준 연평균 증가율.

- 소득 분배 구조의 불균형 완화를 통해 소비 침체를 개선

-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보다 낮아 국내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낮은 점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극복해야 할 사항
- 중산층의 비중이 낮고 소득 분배 악화<sup>2)</sup>로 평균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집중되면서 전체 평균소비성향이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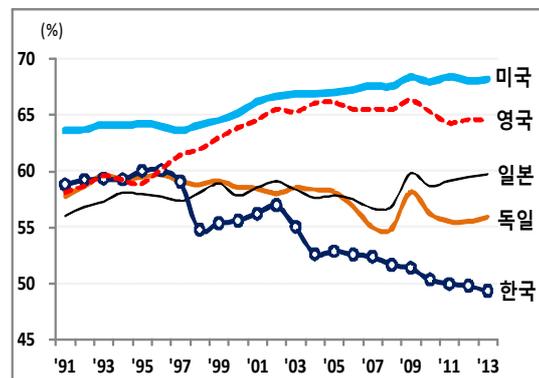
< 가계 소득분배 지표 추이 >



자료 : 통계청.

- 주 : 1)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 2)  $\text{평균소비성향} = \text{소비지출} / \text{처분가능소득}$ .

< 주요국의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 >



자료 : OECD.

○ (시사점)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대책을 강화

- 적극적인 일자리 매칭 서비스 지원을 통해 청년·여성·장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 대학교육과 산업현장 수급의 일치, 육아에 대한 부담 해소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 은퇴후 제2의 취업 지원 대책 강화
- 저소득층 대상의 근로장려세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확한 소득 파악 노력 지속
  - 근로장려세제(EITC)는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이 달라지는 제도이므로 정확한 소득파악이 가장 중요

홍준표 연구위원 (02-2072-6214)

2)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0~1999년 연평균 0.26에서 2000~2013년 연평균 0.28로 상승.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수치가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됨을 의미함.

④ 수출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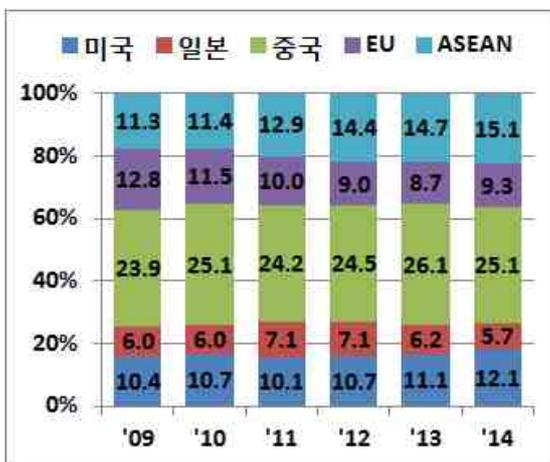
○ (의미) 세계 수출시장과 제조업의 분업구조 등이 재편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포트폴리오 역시 큰 변화에 직면

- 한국의 수출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세계 각 국의 경기, 제조업 분업구조, 수출경쟁 등에 영향을 받음
  - 글로벌 경제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면서 세계 소비시장의 비중 변화가 예상
  -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글로벌 제조업의 분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우리나라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출 구조에 큰 변화가 전망
  - 한-호주 FTA가 발효되고, 한-캐나다, 한-중 FTA가 타결되면서 소비재 수출 구조 역시 변화가 예상

○ (내용) 국가별 수출에서는 미국과 ASEAN으로의 수출이, 품목별 수출은 IT 산업이, 성질별 수출에서는 원자재 및 자본재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국가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별 수출 비중은 대미와 대ASEAN 수출비중이 증가한 반면, 대일본, 대EU 수출은 감소
  - 2008년 이후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개선되면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고, ASEAN은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각광받으면서 수출 증가
  - 대미, 대ASEAN의 수출 증가 추세는 20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국가별 수출 비중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2014년은 1~10월까지 누적 수출 기준.

<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의 세계 수입수요 증감률 >

	2000~2008년	2009~2012년	2013년
IT(23.2)	7.9	11.3	3.5
자동차(13.0)	9.8	14.4	4.5
석유제품(9.7)	19.9	22.8	-2.7
기계(9.4)	12.1	10.8	1.4
조선(6.4)	18.1	0.3	-7.0
철강(6.0)	18.0	11.6	-3.8
석유화학(4.4)	11.3	11.8	1.9

자료 : UN comtrade.  
주 : 괄호안은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중 해당 산업 수출 비중.

- 품목별 : 우리나라의 7대 주력 수출 산업의 세계 수입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출 품목의 변화가 불가피
  - IT,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의 세계 수입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상태
  - 또한 석유제품, 조선, 철강의 경우에는 수입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 수출도 감소하면서 비중 축소 예상
- 성질별 : 글로벌 제조업 생산의 중심이 중국에서 ASEAN으로 넘어감에 따라 우리나라 원자재 및 자본재 수출이 ASEAN을 중심으로 재편
  - 원자재와 자본재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2000년 초반에 비해 급감한 반면 대ASEAN 수출증가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음
  - 또한 한-ASEAN FTA이후 ASEAN지역으로의 해외직접투자(FDI)가 크게 증가하여 향후 대ASEAN으로의 원자재 및 자본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편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중국으로의 소비재 수출은 큰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

< 성질별 대중국 수출 증감률 >

< 성질별 대ASEAN 수출 증감률 >

	대중국 수출 증감률 (%)				대ASEAN 수출 증감률 (%)		
	2000~2008년	2009~2013년	2014년 1~10월		2000~2008년	2009~2013년	2014년 1~10월
원자재 (33.6)	15.7	11.5	-5.2	원자재 (50.1)	16.9	20.8	7.6
자본재 (61.1)	32.5	15.8	1.9	자본재 (42.9)	9.0	18.4	1.2
소비재 (5.3)	16.5	9.5	5.3	소비재 (6.9)	3.4	11.1	3.6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1) ( )는 2013년 기준 대중국 총수출 대비 각 성질별 대중국 수출 비중.

주: 1) ( )는 2013년 기준 대ASEAN 총수출 대비 각 성질별 대ASEAN 수출 비중.

주: 2) 2014년은 1-9월 누적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주: 2) 2014년은 1-9월 누적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시사점)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 대상 국가 포트폴리오는 물론 상품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특히 7대 주력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하는 노력이 필요

오준범 연구원 (02-2072-6247)

⑤ 해외직구와 소비자·유통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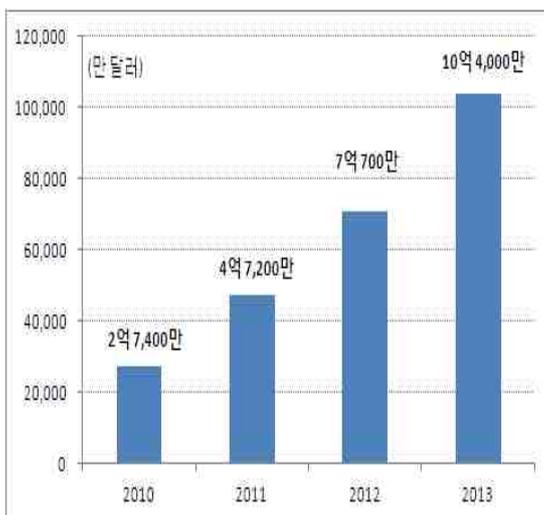
○ (의미) 국내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로부터 직접 물건 구매를 확대하면서 소비와 유통의 새로운 혁명이 가속화

- 온라인 쇼핑을 통한 구매 방식과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유통 방식이 결합하면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로부터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 형태 확산
- 해외 직접구매 확대는 소비와 유통 문화의 새로운 혁명을 가속화

○ (내용) 해외 직접구매 시장 확대로 인해 국내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하는 반면 국내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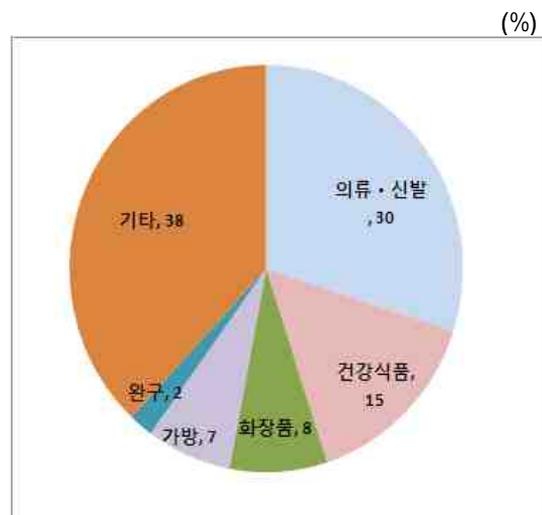
- 해외 직접구매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며 크게 확대됨
- 2010년 2억 7,400만 달러에 머물렀던 해외 직접구매 시장은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3년 10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해 해외 직접구매가 3년 만에 4 배로 크게 확대됨
- 품목별 해외직구 수입통관 비중을 살펴보면, 의류·신발이 30%, 건강식품이 15%, 화장품이 8%, 가방이 7%를 차지함

< 해외 직접구매 시장 규모 >



자료 : 관세청.  
주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기준.

< 품목별 해외직구 수입통관 비중 >



자료 : 관세청.  
주 : 2013년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건수기준으로 품목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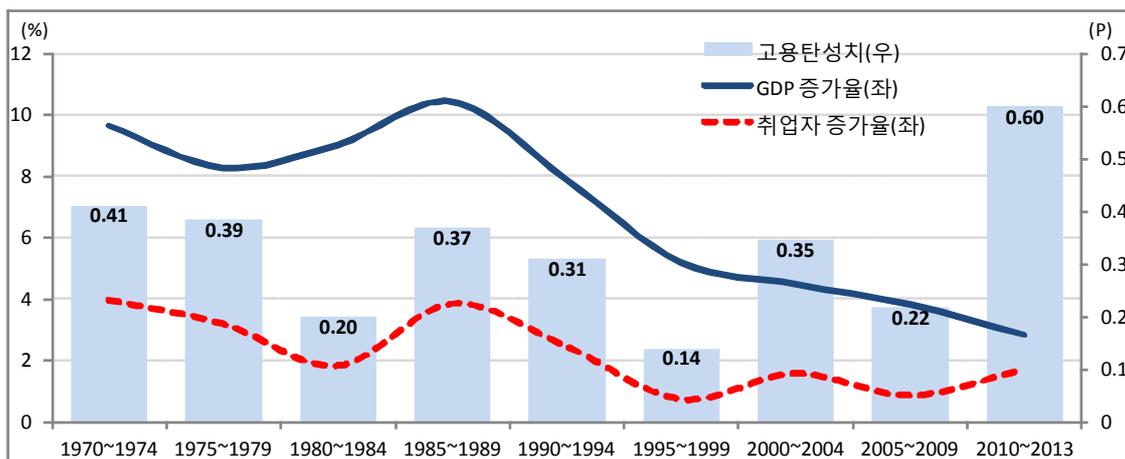
- (소비자의 후생 증대)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 유명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음에 따라 소비자의 후생은 크게 증가함
  - 국내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던 기존의 수입업체는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구매 확대에 의해 큰 타격을 받았지만, 소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물건을 구입함에 따라 후생이 크게 증가함
  - 해외 인터넷쇼핑몰과 경쟁해야 하는 수입업체는 수입품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고, 국내 수출대기업 또한 해외 공급 가격 수준으로 국내 공급 가격을 인하함에 따라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국내 유통 및 제조업체 침체 우려 확대) 국내 유통업체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과 경쟁해야 하고, 내수 제조업체는 내수시장에서조차 외국 제조업체와 경쟁해야 함에 따라 국내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침체에 대한 우려 증가
  - 아마존 같은 해외 인터넷쇼핑몰과 국내 유통업체의 경쟁력의 차이가 매우 크고 내수 제조업체는 내수 시장에서조차 외국 제조업체와 경쟁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국내 유통 및 제조업체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
  - 의류, 화장품, 심지어 의약품까지 직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내수 시장과 해외시장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더 이상 국내소비 회복이 기업생산과 투자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시사점) 해외 직접구매 증가로 인한 소비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정부의 유통 시스템 개선, 소비자 보호 확대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유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뒷받침과 해외직구 소비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 마련
    - 유통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구와 역직구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해외소비자가 편안하게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플랫폼과 물류, 통관 등 국가 간 전자상거래 애로도 해결
    - 외국 업체를 능가하는 강소기업을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에서 대량 육성하는 정부정책 뒷받침
    -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필요

김민정 연구위원 (031-288-7955)

### ⑥ 고용 패러다임 전환

- (의미) 경제·인구·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정책적 기조가 뒷받침 되면서 고용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
  - 투자 위축 및 저성장 기조로 성장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핵심노동력(25~49세)이 축소됨에 따라 향후 노동공급이 부족할 전망
    - 더욱이 산업구조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정책적으로도 유연근로시스템을 확충하게 됨에 따라 고용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
- (내용) 성장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인구구조와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고용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시작
  - ‘고용 없는 성장’에서 ‘성장 없는 고용’으로 : 투자·소비 등 내수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
    -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성장률 하락 폭보다 고용 하락폭이 더 높았으나(고용 없는 성장), 2010년대 들어와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오히려 확대(‘성장 없는 고용’)
    - 고용탄성치(elasticity of employment)<sup>3)</sup>가 1970년대 초반 0.41p에서 2000년대 후반에 0.22p로 하락. 2010년대 들어 통계작성이래 최고 수준인 0.60p로 급등

< 성장과 고용과의 관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 : 고용탄성치=취업자 증가율/GDP 증가율.

3) 고용탄성치는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 능력을 의미한다. 즉, 경제가 1% 성장했을 때 고용이 몇 퍼센트 변화하였는가를 나타낸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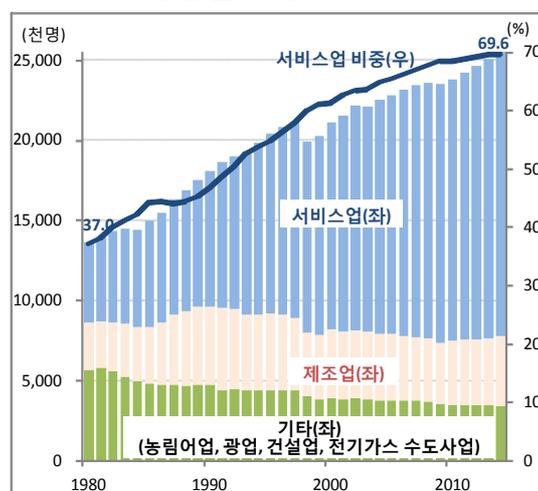
- 일자리 부족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고, 취업자들이 점차 고령화 되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2020년대 노동공급 부족 전망
  -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1980년을 전후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2010년대에는 노동시장의 주요 계층이 됨. 이들이 점차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서 2020년대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전망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고용구조도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
  - 서비스업 취업자는 1980년 506만 명에서 2014년 1,781만 명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총 취업자 중 서비스업 비중이 37.0%에서 69.6%로 확대
  - 특히, 고용 취약계층이던 여성이 서비스산업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확대 견인

< 연령대별 취업자 비중 변화 >

	(%)			
	'80년대 (1989년)	'90년대 (1999년)	'00년대 (2009년)	'10년대 (2014년)
청년층	28.5	23.1	16.8	15.1
30대	27.6	29.7	24.8	22.3
40대	21.7	24.1	27.8	26.1
장년층	18.8	18.6	24.0	28.6
노년층	3.3	4.5	6.6	8.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1 : 각 년대는 말년 기준임.  
 주2 : 장년층은 50~64세를, 노년층은 65세 이상을 의미함.

< 산업별 취업자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1 :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기타 산업을 기타 산업으로 분류.  
 주2 : 2014년은 1~11월까지의 평균임.

- (시사점) 고용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개선이 이뤄지고, 노동공급 부족 현상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며, 서비스업 산업에 적합한 여성 노동 환경 개선이 필요
- 고용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용정책들이 마련되어야만 경제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음

김광석 선임연구원 (02-2072-6215)

⑦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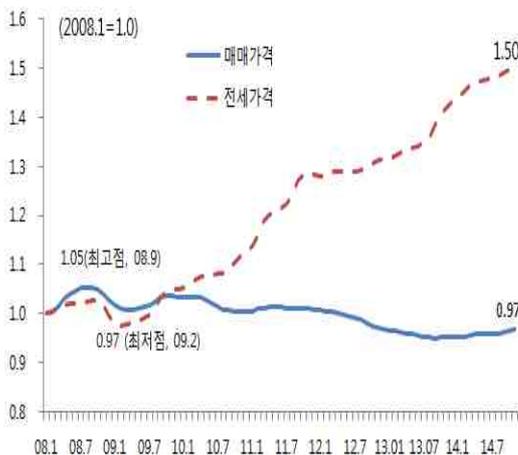
○ (의미) 전세가격 급등과 주택 초과공급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등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의 여건이 개선되면서 '내 집 마련' 가구가 확대될 전망

-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통적 주택시장 메커니즘'이 붕괴된 이후, 최근 들어 다시 전통적 주택시장 메커니즘이 복구되면서 내 집 마련 가구 증가
- 전통적 국내 주택시장 메커니즘이란 '전세가격 상승 →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상승 → 매매가격 상승'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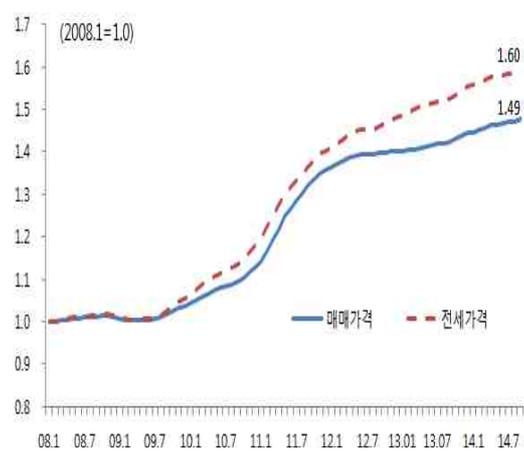
○ (내용) 추세적으로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중과 미분양주택의 흐름을 보아 2015년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이 상승 반전 가능성이 높음

-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비수도권과 달리 전세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전통적 선순환구조가 붕괴
- 수도권 주택시장은 매수수요 부족, 전세수급 불균형 등으로 매매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전세가격은 급등
-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전세가격 급등이 매매가격 급등으로 연결된 국내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시현

< 수도권 아파트매매·전세 지수 >



< 비수도권 아파트매매·전세 지수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KB국민은행 데이터를 사용하여 재구성.

- 하지만 2015년에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중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매매수요를 자극할 선순환 구조로의 복귀 예상
  - 2001년 5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중이 역사적 고점인 66.9%를 기록한 이후 주택가격은 상승 국면으로 전환
  - 2014년 11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중은 67.0%로 역사적 고점에 근접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이를 능가할 가능성이 큼
-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등이 시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초과공급이 2013년 10월 이후 줄어들면서 뚜렷한 하향세를 지속
  - 수도권 주택시장의 초과공급(미분양)이 2013년 10월 36,542호에서 2014년 10월 19,719호로 큰 폭으로 하락

<수도권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중>



< 수도권 미분양주택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아파트매매지수)를 사용해 재구성.

○ (시사점)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상승 반전 가능성이 큰 만큼 전세에서 '내 집 마련' 선호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수도권 주택시장 특히 중소형을 중심으로 상승반전 가능성이 크며,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버블화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
  - 특히 중소형 주택에 대한 상승세가 중대형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
  - 한편 비수도권의 경우 부동산경기 침체를 경험한 수도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버블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필요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031-288-7951)

⑧ 매뉴팩처링 리셋

○ (의미) 글로벌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진국의 제조업 부활, 중국의 추격 등으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국내 제조업을 원점에서 再고안

- 우리나라는 지난 2년간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가, 미약하나마 증가세를 보인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10년부터 3.1%에서 정체

· 반면 중국은 WTO 가입한 2001년에 3.9%에서 2013년 12.1%로 급증하고, 미국은 2008년 8.1%로 저점을 보인 후 증가세로 반전해 2013년 8.6% 시현

- 국내 주력 산업중 반도체, 자동차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근 3년간 성장 정체나 시장 영향력 약화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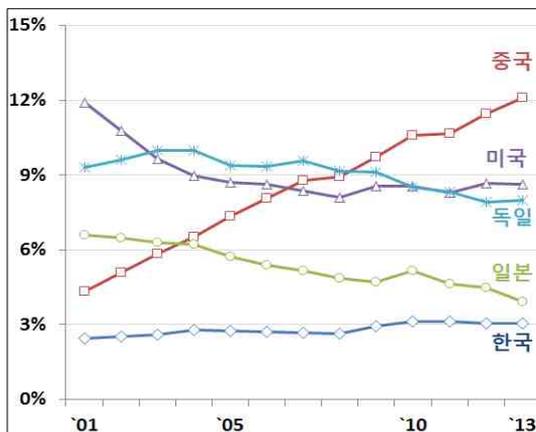
· 통신기기는 세계 시장은 확장세이지만 한국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조선은 세계 시장은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점유율이 하락하는 경향

· 철강, 기계, 완성차, 석유제품은 세계 시장이 위축 또는 정체 상태를 보인 가운데 한국 점유율이 정체 혹은 소폭 상승에 그침

- 금년에 국내 제조 기반을 선도하는 업종 대표 업체들이 실적 악화를 겪고 있어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제조업을 재편(Reset)하는 정책 요청

· 현재 미, 일, 독은 제조업 강화책, 중국은 자국 산업 육성책을 추진 중

< 주요국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



< 주력산업의 세계수출시장성장률과 한국점유율 변화: '11년 대비 '13년 >

산업	세계수출시장 연평균성장률	한국점유율 증가
반도체	4.7%	0.6%p
자동차부품	2.8%	0.3%p
통신기기	5.8%	-0.8%p
조선	-13.4%	-3.5%p
완성차	2.4%	0.1%p
석유제품	-3.8%	0.2%p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UNCOMTRADE, IMF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내용) 미래의 먹거리 사업 발굴 촉진, 산업 혁신 환경 조성의 가속화, 그리고 산업 리셋 정책의 수립
  - 미래 먹거리 사업 추진 전략의 적극 전개: 에너지, 기후, 건강, 소재, ICT 등 미래 유망 부문을 대상으로 한 신제품 및 신서비스 창출 전략 적극 전개
    - 신산업 발굴 부문으로는 ICT, 로봇, 나노, 소재 기술 등을 활용한 제조업 업그레이드와 안전, 문화·예술, 헬스케어 등 융합형 사업 발굴
    - 산업 융합 촉진을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종합 관리 체제를 구축해 기술 개발 및 성과 영향 수준에 따라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 혁신 환경 조성 가속화: 제품 기술과 공정 기술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한 '솔루션 산업 정책' 추진, 시장 창출과 접근성 제고 정책 촉구
    -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 나노기술 등을 접목해 차세대 주력 제품의 발굴 및 신공정 기술 혁신이 촉진
    - 제조중심의 산업 정책에서 벗어나 제조와 공정, 여기에 서비스까지 융합한 '솔루션 산업 정책'을 추진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 재편에 대응
    - 도래할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의 법제도를 개편하며, 특히 시장 창출과 접근성을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산업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촉진
    - R&D 조세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혁신 지향형 생태계 구축, 그리고 융합형 및 우수 R&D 참여 인재를 육성 제고
  - 제조업 혁신을 유인하는 4T(Technology, Trade, Tax, Talent) 관점에서 본 종합적인 산업 리셋(reset) 정책 수립
    - 기존의 산업정책을 재검토하고, 미래 산업 트렌드와 선진국의 제조 육성 정책에 대응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산업 발전 정책 수립을 목표
    - 이 과정에서 기존 산업별로 현상과 미래 모습을 점검하여 리셋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제조업 혁신을 유인하는 "세제(Tax), 교역(Trade), 기술(Technology), 인력(Talent)"등 4T 관점에서의 실행 정책을 마련
- (시사점) 신사업, 신기술의 변화, 중국·일본 등 제조 경쟁국과 선진국의 제조업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산업 육성 정책과 사업 전략을 재설계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031-288-7974)

⑨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호기

○ (의미) 2015년은 오랜만에 찾아오는 선거 없는 해로서, 국회, 시민단체 등 각종 이해관계자와 무관하게 경제구조 개혁을 단행할 절호의 기회

- 2015년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대규모 선거가 없는 해로서 경제의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임

○ (내용)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서비스업, 국내투자, 금융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을 혁신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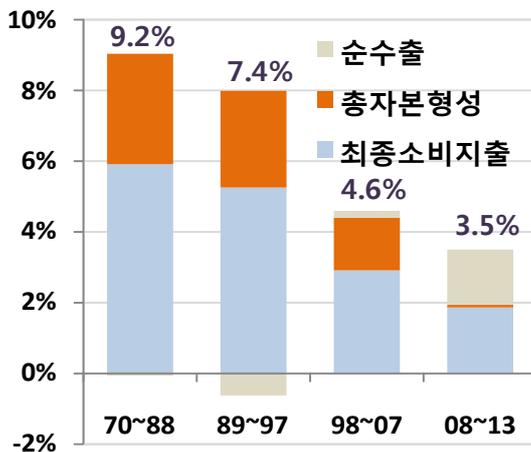
- 필요성 : 최근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으로 하락하고,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계속되는 투자(총자본형성) 부진과 중요소생산성의 하락 등에 따라 최근에는 3%대 중반까지 급락하였음<sup>4)</sup>

· 실제GDP가 잠재GDP를 하회하는 '디플레이션 갭'이 9분기째 지속되고, 실제물가수준이 잠재 물가수준을 밑도는 '마이너스 물가갭'이 13분기째 지속<sup>5)</sup>

- 구조개혁의 방향 : 규제개혁(국내투자 활성화), 노동시장(이중구조 해소), 서비스업(고부가가치화), 금융(모험자본 육성) 등의 측면에서 구조개혁 시급

< 잠재성장률과 항목별 기여도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잠재성장률은 HP필터링 활용 추정.

< 최근 경제성장률과 GDP갭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GDP갭률=(실제GDP-잠재GDP)/잠재GDP.

4) 현대경제연구원(2014), “2014년 한국경제: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복원 필요”, VIP 14-01.

5) 현대경제연구원(2014), “2015년 한국 경제의 주요 특징과 경제전망”, 한국경제주평 14-39.

- **규제개혁과 국내투자 활성화** : 해외에 있는 우리기업의 국내(U턴)투자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도 국내(K턴)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집중
    - 2008년 이후 FDI 순유출국으로 전환. 2008년 32억\$ → 2012년 457억\$<sup>6)</sup>
    - 경제자유구역에 국내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규제를 개혁 필요
    - 월급(만원) : 대기업 정규직(유노조) 392.0 vs. 중소기업 비정규직(무노조) 134.5
    - 국민연금 : 대기업 정규직(유노조) 99.5% vs. 중소기업 비정규직(무노조) 34.2%
    - 고용보호 : 정규직(개별해고) 23위(높음) vs. 기간제 계약직 7위 (낮음)
  -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 저부가가치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료 관광 법률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계를 허무는 등의 규제개혁 시급
    - 우리나라의 2000년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과 달리 미국·일본·독일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즉,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미·일·독 서비스업 생산성)의 비율은 2000년 31%에서 2009년 24%로 오히려 하락<sup>7)</sup>
  - **모험자본의 육성과 창조경제 활성화** : 기술력과 사업아이디어를 토대로 한 창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털 등 모험자본을 육성하는 등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확립과 창조경제 활성화가 필요
    - 전체 벤처기업 가운데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의 비율(코스닥시장 진입률)이 2008년 1.7%에서 2013년 1.0%로 하락
- (시사점) 국내외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논의의 확산 및 소통 강화가 필요
- 경제 구조개혁은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므로, 사회적 논의의 확산과 소통의 강화를 통해 구조개혁의 추진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함

김동열 기업정책연구실장 (031-288-7950)

6) UNCTAD자료. 한국은행(2014)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고정투자는 연평균 4%대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27%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7) 현대경제연구원(2014), “서비스업 생산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경제주평 14-13호, 2014.3.28.

⑩ 인구위험의 현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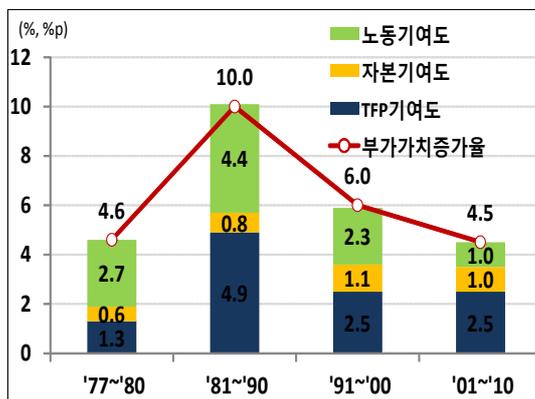
○ (의미)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인구위험이 미래가 아닌 현재 위험으로 대두

- 고령화와 저출산의 급속한 진행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더불어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가 심화
- 한국은 2015년 고령인구 비중이 13.1%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의 초입에 와 있으며 2017년(14.0%)에는 고령사회 진입, 2026년(20.8%)에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sup>8)</sup>

○ (내용)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성, 일자리, 재정, 부동산시장 등에 경제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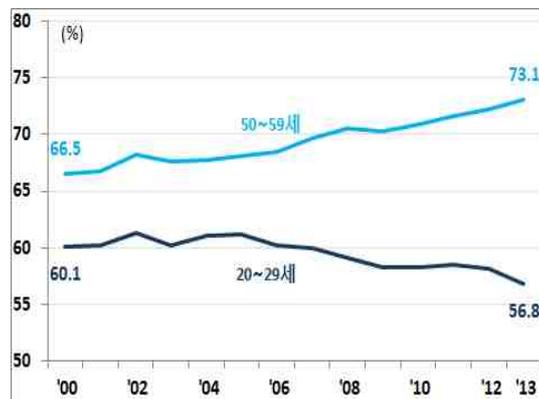
- 성장률 잠식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 투입, 소비 및 투자 등의 감소가 국내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킴
-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성장에 대한 노동기여도를 낮춰 성장률을 둔화시킴
- 고령화 현상에 직면하면 경제주체들은 모든 연령층에서 노년시기에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인식하여 소비를 줄이며 미래를 대비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총저축률 하락, 연금 부담 및 고령인력의 임금상승 등 기업 부담 증가로 R&D나 신규투자가 축소될 가능성

< 시기별 성장 기여도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20대와 50대의 고용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8) 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 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 초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

- 세대 간 일자리 경쟁 심화 : 고령층의 일자리 진입이 보다 활발해지는 반면 청년층 고용 창출력은 정체되어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점차 심화
  - 청년층은 산업 수요와 대학교육 간 미스매치로 인해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 반면 고령층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 정년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등 고용연장 조치 등으로 일자리 진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질 것
  
- 재정 지출 급증 : 정부의 노인복지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임
  - 고령화 진전에 따라 세원이 되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 각종 사회 보장 및 의료비 지출이 늘어 정부 재정수지에 부담이 가중
  - 노인인구 1% 증가시 재정수지(GDP 대비)는 0.46%p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sup>9)</sup>
  
- 주택시장 변화 :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주택수요 위축 및 주택규모 변화 등 주택 시장 내 변화가 예상
  - 자산의 상당부분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베이비부머가 점차 고령기에 진입하면서 주택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구원수 및 소득수준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형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
  
- (시사점) 저출산·고령사회 위험에 대비해 생산성 향상, 고용 확대 및 재정수지 부담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 위험에 대비하여 노동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령·여성층의 노동참가 촉진과 출산율을 제고하고 인적자본의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청년층 고용 확대 여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세입 확충 및 세출 절감 정책이 추진될 필요

김천구 선임연구원 (02-2072-6211)

9) IMF (2004), "How will Demographic Change Affect the Global Economy?",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⑪ 분단 70년, 평화통일 기반조성 본격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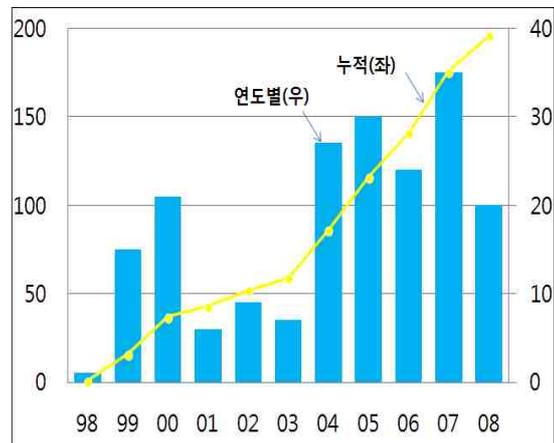
- (의미) 2015년은 남북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신뢰 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 고조
  -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으면서 남북간 신뢰 재구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2015년은 북한에게 있어서 김정은 체제 출범 3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본격적인 경제 성화 도출의 필요성 증가
    - 북한은 주민생활향상과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대내외적인 개혁·개방과 남북관계 개선 노력 기대
  - 한국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실질적 추진 기반 구축 노력 지속
- (내용) 남북경협, 사회문화교류, 인도지원 분야에서 남북간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
  - 개성공단의 1단계 사업 완료 및 2단계 개발, 외국기업 유치 등 국제화 추진과 함께,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 등 기추진 사업의 재개 및 활성화 추진 필요
    - 개성공단 3통 문제뿐 아니라, 노무·세무·보험제도 개선 및 분쟁해결절차 마련 등 국제적 수준의 법제도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재발방지와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은 물론, 투자재산의 보호, 분쟁해결절차 마련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 및 실제 운영 현황(2014년 6월 기준) >

	총 개발계획	실제 운영 현황	계획 대비 진행률
개발면적	총 2,000만평	1단계 100만평	5% 수준
업체수	총 2,000개	125개	6% 수준
고용인력	총 35만명	5.3만여명	15% 수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작성.

< 연도별 금강산 관광객 추이 >  
(단위 : 만 명)



주 : 2008년은 중단되기 이전까지인 1~7월까지의 관광객수를 의미.

- 남북 양자간 사업뿐 아니라 다자간 사업 추진 기반 조성도 추진
  - GTI<sup>10)</sup>, 북중·북러간 철도·도로·항만 사업과 TSR~TCR~TKR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등 북중·북러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역내 경제 협력 사업에 참여 유도
- 단순한 지원에서 농업·보건의료·녹색사업 등 개발협력을 구체화하는 ‘그린 데탕트’를 통해 지원 효과 제고 및 교류 협력 활성화 도모
  - 영농 기술 전수 및 우수 품종 남북 공동 개발, 대규모 농업 인프라 지원과 함께, 황폐지 조림, 수력발전소 개보수, 풍력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CDM 사업을 추진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남북자·국군포로 고향 방문을 우선적으로 추진
  - 현재 이산가족 사망자는 연간 약 3,800명에 달하며, 사망률과 상봉률 격차로 인해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연 2,200명에 달함
- (시사점)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 경험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인도 지원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기회라는 인식 하에 지금부터 남북경협 강화를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남북경협은 지역경제 활성화, 한계 중소기업의 활로 제공 등 남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남북 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한 제도화의 진전과 함께, 실천의지를 뒷받침할 장치가 필요
    - 남북 주민들의 출입·체류와 정치·경제·사회문화 교류 관련 업무와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함
  -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한 대규모 경험 프로젝트 추진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확장을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노력도 동반되어야 함

이해정 연구위원 (031-288-7965)

10)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두만강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이 설립되어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2009년 탈퇴) 등이 참여.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로 개칭.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2.7	1.8	4.5	3.5	1.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0.8
일본	2.0	3.7	-1.7	-3.1	-0.2	1.7	5.2	3.4	1.4	-0.2	0.9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4

주 : 1)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0월 전망 기준.ks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12월 11일	12월 18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16	2.14	-0.02%p
	엔/달러	85.86	98.51	105.04	118.65	118.99	0.34¥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2411	1.2334	-0.0077\$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7,596	17,778	182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7,257	17,529	272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13	2.18	0.05%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100.9	1,101.5	0.6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1,916.6	1,897.5	-19.1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12월11일	12월 18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59.91	54.46	-5.45\$
	Dubai	107.99	100.38	107.88	61.57	56.42	-5.15\$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246.02	238.45	-7.57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3.0	3.7	3.6	3.6	3.5	3.6	3.6
	민간소비 (%)	1.9	2.0	2.0	2.6	2.3	3.0	2.6	2.8
	건설투자 (%)	-3.9	6.7	1.9	1.8	1.9	1.8	4.3	3.0
	설비투자 (%)	0.1	-1.5	7.5	3.9	5.7	4.2	6.0	5.1
	지재투자 (%)	8.6	7.3	6.5	5.9	6.2	7.3	7.0	7.1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508	799	392	408	800	320	36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440	202	231	433	192	234	426
	수 출 (억 달러)	5,479	5,596	2,833	2,936	5,770	2,949	3,074	6,023
	(증가율, %)	(-1.3)	(2.1)	(2.5)	(3.7)	(3.1)	(4.1)	(4.7)	(4.4)
	수 입 (억 달러)	5,196	5,156	2,631	2,705	5,336	2,757	2,840	5,597
	(증가율, %)	(-0.9)	(-0.8)	(2.6)	(4.4)	(3.5)	(4.8)	(5.0)	(4.9)
소비자물가 (평균, %)	2.2	1.3	1.4	1.9	1.7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2	64.4	65.0	65.6	65.3	66.0	66.5	66.2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